

제 181 회 일본전문가초청세미나

강연자: 박상준(와세다대)

주제: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경제의 현황

와세다대학교 국제교양학부 박상준 교수님의 세미나가 3 월 24 일 국제대학원 GL 룸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경제의 현황 ” 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2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경제의 움직임은 일본은 물론,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 엔화 가치의 급격한 절하는 한국-중국 등의 경제의 대상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베노믹스의 배경에서 출발하여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되는 경제변수들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일본경제의 현황을 진단하였다. 특히, 엔화의 저평가 가능성을 진단하고, 엔화의 움직임이 일본경제와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박상준 교수는 아베노믹스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크게 장기침체의 원인, 2)2000 년대 양적완화정책의 경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각국의 대응 그리고 1990 년대 재정건전화 정책의 경험으로 나누어졌다.

일본이 1990 년에서 1992 년 버블 붕괴 이후, 90 년대 내내 1% 미만의 성장률, 즉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이며 경제가 심히 침체되어 있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잠재성장률의 저하를 들 수 있다. Hayashi and Prescott(2002)은, 총공급 부문에 주목하여 일본 경제가 가지고 있는 총 생산능력자체가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고령화시대로 인한 노동가능연령 인구의 감소와 평균 노동시간이 감소가 일본 경기전체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박상준 교수는 1990 년대 급감한 총요소생산성(TFP)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1992 년과 96 년 말에서 97 년 초, 이 두 기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일본은 평균 마이너스 2% 이상의 GDP 갭을 경험하였고 앞서 말한 총공급 뿐만 아니라 총수요 부문에서도 침체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총수요 부문에서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감소가 그 요인으로 지목되며, 이 분야에서의 부진은 정부의 소비와 투자지출의 증가로 인하여 어느 정도 보전은 되었으나,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였다.

2000 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은 양적완화정책을 펼쳤는데 2001 년 4 월부터 2006 년 6 월까지 극단적인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하여 콜금리를 0.1% 이하로 유지하였다. 그 당시 환율은 현재와 다르지 않은 104.8-133.5 엔 대를 유지하였으며, 2002-2006 년의 평균 실질 GDP 증가율은 0.48%로 1994-2012 년의 평균치 0.2%를 상회하였다. 결과적으로 양적완화정책은 성공적으로 평가되었으며 당시 일본 총리였던 고이즈미 정권 시절의 좋았던 경험을 하게되고 현재 아베 정권이 내세우는 양적완화정책의 기반이 되었다.

2008 년-2010 년의 전세계적 금융위기에도 일본은 미국과 유럽 등 타 국과 달리 본원통화의 양을 급격히 증가시키지 않았으나, 2013 년 아베노믹스가 본격화하면서 본원통화증가율이 30%를 넘어서게 된 점에 주목하였다. 일본은 양적완화정책을 썼을 때의 좋은 경험과 양적완화정책을 쓰지 않았을 때의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박상준 교수는 언급하였다.

이어서 1990 년대 재정긴축 정책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1995 년 9 월 이후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고 1997 년 4 월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하고, 11 월에는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2%의 소비세율 인상 후, 1997 년 2 사분기의 성장률이 -0.9%로 1994 년 4 사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당시 하시모토 내각은 퇴각하였고, 1998 년 12 월 오부치 내각은 재정구조개혁법 폐지되었다. 같은 기간, 장기신용은행·야마이치증권 등 대규모 금융기관의 파산이 속출하여 극심한 신용경색을 겪게 되었다. 1997 년 아시아를 강타한 아시아금융위기 역시 위의 언급한 요인과 더불어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일본의 수출은 1987 년 이후 처음으로 1998 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소비세율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1998-1999 2 년 연속으로 감소하였고 이 시기의 재정지출 확대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나,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비세의 경우 1988 년 12 월 30 일 타케시타 내각에서 처음으로 소비세법이 공포되었고 1989 년 4 월 1 일 소비세법이 시행되었으며 이 때의 세율은 3%이다. 이후, 소비세를 올렸던 타케시타 노보루 내각과 3%에서 5%로 인상시킨 하시모토 내각이 사퇴한 것으로 보아 소비세 인상은 정치가의 무덤이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현재 2020 년 동경올림픽을 앞에 두고 심각한 정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소비세를 적어도 15%, 많게는 20% 인상시킬거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후 이후,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일본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기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국채 비용이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채권 가격과 인기가 감소함에 따라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베노믹스 이후, 국채 금리가 많이 감소하였고 현재 0.5%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 태도지수로 보았을 때,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지만 아베노믹스 이후 크게 개선된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반면, 유효구인배율을 보아 일본의 국내노동시장은 많이 개선되었다. 2015 년 임금교섭을 보았을 때, 월급여 베이스가 인상된 기업이 많았고 이로 인하여 주식시장과 내수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명목임금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법인기업 경기예측조사에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개선된 조짐이 보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 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정부 채무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부채는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었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

가계의 총금융자산, 즉 가계의 저축액인 1 경원을 뛰어 넘는 부채를 갖고 있는 정부가 가장 취약하며 그 외의 소비자태도지수, 기업경기동향, 투자동향을 보았을 때도 확실히 경기가 안정권에 들어섰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것이 박상준 교수의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경제 현황에 대한 평가이다.

<질의응답>

질문 : 노동시간과 노동자수 감소가 왜 생산성을 악화 시키는지?

답변 : 생산성이 낮은 일본의 좀비기업이 아직 남아 있다. 생산성이 높은 플랜트가 해외로 이전하여 점점 사라지고 있다. 국내의 높은 임금과 낮은 경쟁력이 원인이 아니라 해외에 이전할 만한 여력과 인적자산이 있기에 해외로 이전하였고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들은 생산성이 낮은 좀비기업들이다.

질문 : 일본노동시장(건설)의 현황은 어떠한 지? 과거의 인프라 투자 실패?

답변 : 노동력의 부족과 집값 상승이 현 상황이며, 대대분의 인프라 투자는 3.11 복구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만큼 2020 년 올림픽에 전 노동력이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 과거 인프라 투자가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채로 인하여 적재적소의 좋은 투자가 아니라 부패하거나 필요없는 곳에 나쁜 투자를 하였기 때문이다.

질문 : 아베노믹스로 인하여 미래의 경제인구, 즉 젊은 노동인구의 노동 의욕 감소는 왜? 여성과 젊은층이 일할 수 있는 사회 구현 가능한 것인가?

답변 : 고령화된 인구 구조, 저출산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하여 일본 경제는 활력을 느끼기 힘들며 1-2%의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취업시장에 있어서 정규직을 원하지 않는 젊은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활력을 잃어버리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에 대한 인식 또한 “아름답게 가라앉자” 라는 논평이 있을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배타적인 사회적 인식을 갖고 있다.

질문 : 정부가 실시하는 임금정책은 대기업의 임금 상승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임금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가?

답변 : 대기업의 임금을 올려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대기업 중심의 약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임금 향상으로 이어지는 매커니즘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질문 : 물가상승률 2% 목표 달성 2 년 내로 이루겠다는 약속 ! 추가 1 년 지속? Or
추가완화 할 경우,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답변 : 하나의 도구로서의 양적완화 계속 할 수 있으며 물론, 이 정책 자체의 부작용은
후일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15 년 일본경제지표가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양적완화정책 은
지속될 것이다.

질문 : 일본은 TPP 를 통해서 내수시장을 타계하려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하려는건지?

답변 : 외국시장 개척 추진 및 유지를 할 수 밖에 없다. 내수시장의 한계와 침체가 있기
때문에 TPP 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질문 : 가계저축이 많은 일본사회를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 태도는 더 나쁘지 않나? 제 3 의 화살 성공할 수 있나?

답변 : 아베노믹스의 제 1,2 화살 은 총수요 증가를, 제 3 의 화살은 총공급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개혁 자체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총공급의 개선의 여지는
현재로서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며 소비에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안감은 매우
크며 소득대비저축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